5·18 행불자 등 '과거사 DNA' 통합 DB화해야 한다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후 유전자 정보 관리 법적 근거 부족 통합 관리할 독립 기구 설립해 지속적 행불자 조사 나서야

5·18 45주년 기념 세미나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암매장 희생자를 비 롯해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전자(DNA)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와 데이터베이스(DB) 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연식 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 조사위) 조사2과장은 27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앞두고 공개한 '국가권 력에 의한 희생자 암매장·행방불명·강제실 현황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허 전 과장은 "5·18을 비롯해 과거사 조사 과정에 서 생성된 유해와 행불자 가족의 DNA 데이터 등 수집한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독립된 기 구를 지정·설립해야 한다"며 "해당 기구는 생명윤 리법, 변사자 처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 거사 유해와 행불자 가족들의 DNA 데이터, 유전 자 검출에 필요한 시료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권 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5·18진상조사위가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DNA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보관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5·18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수집한 DNA 정보를 관리, 유지할 수 있 는 주체가 없어지고 법률적 근거도 부족해졌다.

결국 5·18진상조사위가 발굴한 유해와 행불자 가족들의 DNA 데이터, DNA 검출에 필요한 시료 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기관을 만 들어야 지속적인 행불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특히 5·18진상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옛 광주교 도소 터에서 유해를 발굴했더니 제주4·3사건 관련 행불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 점에서 5·18진상조 사위가 확보한 다른 유해들의 DNA 정보가 제주4· 3사건, 여순사건 등과 연결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 허전 과장 주장이다.

세미나 발제자로 참여한 DNA 분석 전문 민간업체 이재원 (주)우리노바 이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 이사는 발제문을 통해 "행불자·암매장 등 조사를 해 왔던 5·18진상조사위 등 각 기관이 보유한 DNA 정보 DB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국 수사기관과 연계해 신원불상 시신 등에 대한 DNA 정보를 보 유 중이나, 수사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민간인 피 해자나 과거사 관련 실종자 대상 DB를 분리하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족·군인 등에 대한 DNA DB를 갖고 있으 며 연간 수천 건의 유전자 채취, 유해 발굴을 하고 있지만 군 중심이라 민간인 희생자가 배제되고 진 화위와 데이터 연동이 안 된다. 경찰청과 통일부도 각각 실종자, 이산가족 등 DNA를 갖고 있지만 다 른 기관의 DB와 연계는 안 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폭력 희생자, 실종자, 암매장 희생자 등 일부 유족 진술 을 확보해 유해 발굴을 시도한 바 있으나 유해발굴 강제 권한이 없고 DNA 수집·분석 체계조차 갖춰 져 있지 않아 DB를 갖고 있지 않다. 5·18진상조사 위도 채취한 DNA 정보를 진화위와 연계하지도 않 은 채 활동을 종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26일 광주시 북구 일곡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위기탈출 안심 호신술 배움터에 참가한 학부모들이 합기도 사범들로부터 공격과 방어 기술 등의 호신술을 배우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북구와 (사)세이프온, 광주북부경찰, 도선체육관이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신안 해양관광 '다이아몬드 제도' 핵심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 공사 본격화

2122억 투입 총연장 3.04km

신안 장산~자라 연도교 개설 공사가 본격화된 다.

전남도는 26일 신안 장산면 북강선착장에서 김 영록 전남지사, 김대인 신안군수 권하대행, 김문 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최미숙 도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산~자라 연도교 개 설 착공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제805호 선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으로, 신안 해양관광 브 랜드인 '다이아몬드 제도' 구상의 핵심축이다.

총연장 3.04km(해상교량 1.63km) 구간 왕복 2차

로로 신설되며, 총사업비 2122억원이 투입된다.

연도교가 개통되면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목 포의 응급의료센터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배편 2 시간 이상에서 차량 기준 1시간 내외로 단축된다.

다이아몬드 제도는 신안 14개 읍·면 중 자은·암 태·팔금·안좌·장산·신의·하의·도초·비금 등 9개 면이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

이 지역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는 총 16개가 계획돼 있는데 현재까지 8개가 개통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연도교 착공을 계기로 장 산을 비롯한 신안군의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진실화해위, 2000건 규명 못했다

조사 만료…'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등 조사 중지 4년간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8808건 처리 '89.9%'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 해위)의 조사 기간이 26일 만료되면서 진실규명을 요청한 과거사 2000여건이 '조사 중지' 상태로 남

진실화해위는 이날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만료 기자간담회'를 열 고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2021년 조사를 개시한 후 4년 동 안 전체 사건 2만924건 중 1만 8808건(89.9%)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사건과 진실규명이 확인된 사건은 1만 1908건(56.9%)으로, 집단 희생이나 인권 침해 등이 인정된 사건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 밖에 6900건(33.0%)이 불능·각하·취하·이송 결정을 받아 종결됐으며, 2116건(10.1%)은 조사 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 중지됐다.

1950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희생자 4명의 사망 19년 뒤 진도경찰서가 작성한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에 '암살대원'으로 적 혀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보류 결정을 받은 뒤 최종 조사 중지 처리됐다.

한편, 진실화해위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진실 화해위지부는 앞서 자료를 내고 조사 중지 사건 중 368건은 보고서가 완성됐는데도 소위원회와 전체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묻지마 보류'됐다며 문

노조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 전후 민간인 희 생 사건 등을 다루는 조사1국에서만 이 같은 보류 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6개월간 종 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11월 26일 모든 활동을 종료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광주·전남 교육청, 교권 보호·민원 대응 체계 강화

제주 교사 추모 공간 마련도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최근 민원에 시달리다 가 학교에서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민원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본청 이음광장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오는 27일 오전 8시 50분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추모 공간은 오는 30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

수 있도록 개방한다.

숨진 제주 교사 등 교육활동 중 순직한 교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관도 시교육 청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사이버 추모관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심리 상 담, 법률상담 신청, 각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 권 자료실 이용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재

점검하고 교육활동을 침해받는 교원을 적극적으 로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도 민원전화의 교실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교사 개인 연락처도 일선 학교에서 철저 히 보호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해 특이 민원 대응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적 위반 사 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

민원대응팀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장 대상 교육 활동 보호 연찬회와 컨설팅도 오는 6월 25·26일 실시할 방침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첨단우리병원

